

의대·무전공 '역대급 변수'...수험생들 속 탄다

수시 모집 다가오는데 정원조차 파악하기 힘들어
 내달 입학전형 발표 전까지 입시상담 사실상 중단

“대학 입시의 기본 중의 기본인 모집정원 자체가 혼돈에 빠지면서 상담 자체가 의미 없다.”
 대구지역 한 학교 A진학상담 교사는 2025학년도 입시 이야기가 나오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다음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전형 발표가 있을 때까지 입시 관련 상담이 사실상 중단됐다.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A교사는 “의대 정원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며 “연쇄적으로 학생들이 이동될 수밖에 없어 성적에 관계없이 선불리 조언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오는 11월 14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5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9월 9일부터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대체로 현시점에는 지난해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운다.
 이처럼 대입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수험생들은 역대 가장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불안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킬러문항’ 제외가 발표되면서 혼란이 있었지만 올해는 모집요강 조차 가능할 수 없어 더 큰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2000명 정원 확대를 발표했다가 최근 대학 자율로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각 대학별로 모집 정원을 확정, 대교협에 제출해야 된다.
 이미 제출한 대학도 있지만 의대 정원이 자율 증원으로 바뀌면서 오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어 수험생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그만큼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전제로 중위권 등 다른 학생들도 입시 전력을 세우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변수가 너무 많다.
 무전공 확대도 수험생으로서 고민이 큰 지점이다.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등에 무전공 모집을 전체 모집정원의 25%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무전공이 늘어나면 다른 학교 정원에 영향을 미쳐 모집정원의 변동이 불가피하다.
 다양한 전형이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에게 유리한 전형에 집중해야 하는데 무전공 확대도 전략을 가능하게 힘들다.
 무전공이 확대되면서 경쟁률, 합격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어떻게 반영될지 미지수다. 2면에 계속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집중 또 집중 23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중앙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시험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정훈진 기자 jhj131@kyongbuk.com

“민생·국정 현안 폭넓게 논의” 큰 틀 합의

대통령실 - 민주당, 영수회담 첫 실무회담... 날짜는 추후 확정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 회담을 열어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홍철호 신임 정부수석과 차순오 정부비서관, 민주당에선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

실장이 참여했다.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실장은 언론 공지에서 “회담은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시급한 민생문

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분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2차 준비 회담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신청사 건립 위한 칠곡행정타운 매각 즉각 중단해야”

“가치 높은 개발 예정지...북구 지역 주민들 위해 활용되어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대구시 ‘오락가락 불통 행정’ 비판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 의원이 대구시가 추진하는 칠곡행정타운 매각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국공립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대구북부 발전의 희망을 품게 한 대표적인 개발 예정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23일 “대구시가 시청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칠곡행정타운 매각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의 발전을 도외시키고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매각 결정으로 강력

하게 반대 의견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구시를 향해 오락가락하는 불통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2022년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철회한 대구시가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행정을 두고서다.
 김 의원은 “이미 지역 사회의 강한 반대 의견으로 매각을 철회했음에도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대구시의 행정은 지역 사회의 큰 혼란을 부추기고,

대구시정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낳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칠곡행정타운 부지 반경 2km에는 북구 강북·칠곡 인구 약 25만 명 가운데 60% 이상인 16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군위군 대구 편입과 인근 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해 폭증할 공공·문화시설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부지로도 꼽힌다.

김 의원은 “특히 북구 강북지역은 대구 타 지역에 비해 국공립 시설과 문화·커뮤니티시설이 현격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추가 개발에도 방치돼 많은 지역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라고 대변했다. 또 “해당 부지는 대구강북 최고의 요충지로, 매입 당시 가격에 비해 5배 이상의 공시가격을 기록하는 등 나날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향후 통합신공항 건설 등으로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데다 매각 시 두 번 다시 매입이 불가능한 최악의 행정용지”라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전재용 기자 jyy820@kyongbuk.com

대통령실 “원점 재검토 의료계 주장 매우 유감”
 ‘5+4 의정협약체’ 참여 촉구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상운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약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아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7면**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회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가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또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포항시 ‘K-로봇밸리’ 구축 시동 > 3면
 與, ‘관리형 비대위’로 조기 전대 > 4면
 ‘마약 밀수’ 태국인 무더기 검거 > 6면

신비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문화재단

2024 영주 한국선비 문화축제

2024. 5. 4(토) ~ 5. 6(월)
 경북 영주시 문정둔치(시민운동장 앞) 및 선비촌 일원